

나주, 차세대 전력망 중심으로 ‘우뚝’ K-그리드 창업·인재허브 본격 가동

기후부, K-그리드 밸리 조성논의
전력망 혁신·창업생태계 청사진
AI·VPP·ESS 기술 스타트업 주도
한에공, 오픈캠퍼스로 협업 확대
전력산업 새 성장축 본격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우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 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루버그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대 캠퍼스 조감도.

/한국에너지공대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

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中企 기술 무단사용… 카펫발레오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1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펫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 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펫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한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펫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

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펫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전KPS, 우루과이 발전소 400억 연장계약

최대 392억 규모 추가 매출 기대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의 발전정비공사 연장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간)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사업’의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최대 392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상업적 사업지로,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정비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티그레 발전소는 전력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첨두부하용(peak load)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발전소 가동률 98% 이상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간) 우루과이 전력청과 티그레 발전소 O&M사업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한전KPS

을 유지하며 현지 전력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발전소 최초의 대규모 정비를 무결점으로 완수해 우루과이 전력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계약은 이러한 기술력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협력의 결실 결과로 평가된다. 김흥연 사장은 2년 전 직접 우루과이를 방문해 전력청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 대사관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지원과 행정 협조를 제공해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무관용 원칙 구속 등 강제수사 활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주 아연 공장 질식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수조 내 질식 사고의 발생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부·검찰·경찰이 합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필요시 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전날 경북 경주의 한 아연 제조공장에서 암모니아 저장장치 공사 중 발생했다. 하청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 1명이 부상했다. 김 장관은 사고 직후 현장으로 이동해 수습을 지휘하고, 중앙·지역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지원에 나섰다.

김 장관은 “노동자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유가족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치료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사전협의’ 필수에 의무구매 무력화 공공기관, 5년간 9조6000억 미달

산단공·가스공사 등 이행 부진
‘사전협의’ 초과달성 통계 왜곡
경영평가 감점도 실효성 논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필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치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필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KIAT, 中企에 공공기술 565건 이전

내달 3일 양재서 기술나눔 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090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16개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공

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의 총 565건의 기술이 이전 대상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핵심시스템 및 설비 101건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90건 ▲검사·진단 및 유지보수 79건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50건 등이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나눔 온라인 신청시스템(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또 KIAT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8층 엘가든홀)에서 ‘기술나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